

월요광장



강용주
광주트라우마센터장

지난해 12월, 광주 트라우마센터는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가폭력·고문생존자 재활과 국가의 의무에 관한 국제심포지움’을 열었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노라 스베아스 위원과 조지 투구시 위원, 유럽의 고문생존자재활센터 네트워크 엘리제 비텐 바인더 의장, 미국 고문피해자센터 누신 사르카라티 변호사, 이영문 국립공주병원장, 숙명여대 정경수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5·18 광주민주화운동 생존자 및 제주 4·3사건 생존자, ‘진실의 힘’ 고문조작간접 생존자가 토론에 참여했다.

유엔이 1987년 ‘고문방지협약’을 채택한 이후, 국제사회는 ‘고문 없는 세상’이라는 인류의 위대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 치열하

게 노력해 왔다. 이 협약 14조는 ‘당사국은 국내법 체계 내에서 고문으로 인한 피해자가 구제를 받고, 가능한 한 완전한 재활수단을 포함하여 공정하고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한다’고 규정했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2012년 11월, 고문생존자 재활에 관한 국가의 의무를 특별히 강조하여 14조에 대한 ‘일반논평 3’을 채택했다. 국가가 피해자를 구제할 때 원상회복·금전적 보상·재활·진실에 대한 권리 및 재발방지 보장 등 다섯 가지 원칙을 명시한 것이다.

아울러 피해자 중심의 접근방식을 채택했다. 구제절차에서 피해자 개인의 요구를 중심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적절한 회복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피해자들 및 피해자 대리 단체와 상의하며, 이 모든 과정에서 피해자의 재트라우마를 방지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3년 4월 ‘유엔총회 결의문’을 채택, 고문생존자의 재활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협약 14조 및 ‘일반논평 3’에 따른 국가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문생존자 치료를 위한 재

활센터를 설립·운영·유지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피해자에 초점을 두고, 피해자의 구제 및 신체적·정신적 재활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뜻이다.

‘일반논평 3’과 ‘유엔총회 결의문’을 토대로 국제사회에서는 ‘생존자 재활의 권리’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다. 2013년 4월 고문생존자재활센터 유럽네트워크는 ‘고문생존자 재활에 관한 국가의 책임’이라는 주제로 스웨덴 국회에서 국제회의를 열고 완전한 재활 수단을 제공할 국가의 의무에 관해 발표했다.

6월 26일 ‘유엔 고문피해자 지원의 날’을 맞이하여 국제고문피해자재활협회(IRCT)는 레바논에서 ‘고문피해자를 위한 재활의 권리’ 국제 심포지움을 열고, 9월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고문피해자 재활센터들도 인도에서 ‘아시아의 현실’을 주제로 회의를 개최했다.

광주 트라우마센터가 국회에서 ‘국가폭력·고문생존자 재활과 국가의 의무에 관한 국제심포지움’을 연 것은 이런 국제적 흐름에 발맞춘 것이다.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 분단과 전쟁, 군부독재를 겪으며 30만 명 가량의 국가폭력 피해자가 생겼고, 이들 대다수가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겪어 왔다.

이들에 대한 구제·재활에 대한 논의는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심리 치료나 재활에 관한 논의도 부족한 현실이다. 이 심포지움은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이 자리에서는 고문, 의문사, 민간인 학살, 반인권적 공권력 행사 등 국가폭력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을 되찾기 위한 재활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의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아울러, 한국정부가 국제사회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국가폭력이나 고문생존자의 치유·재활을 위한 상설적인 전문치유기관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이제 국가가 나서야 할 때다. 이번 심포지움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고문피해자의 규정, 그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의 범위 등에 대해 한국사회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국가폭력·고문 생존자 구제 및 재활의 권리를 인식하고,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5·18을 비롯한 국가폭력 생존자의 재활의 권리는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함께 성취한 우리나라가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인권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그 일에 광주트라우마센터가 함께할 것이다.

社說

전남에 AI 유입, 확산 방지에 사활 걸어야

전북, 충남에 이어 전남에도 조류 인플루엔자(AI)가 유입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방역에 초비상이 걸렸다. 전남에서 오리나 닭이 AI에 감염된 것은 AI와 구제역으로 전국이 패니 상태에 빠졌던 2011년 이후 3년 만이다. 가장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전남은 전국 오리 사육량의 절반에 가까운 48%, 닭 사육량의 12.4%를 차지하는 최대 사육지로서 AI가 확산될 경우 사육농가의 초토화는 물론이고 지역경제도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들 전 해남군 송지면 한 농장에서 폐사한 오리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고 한다. 고병원성 여부는 며칠 후 확인될 것으로 보이지만 전북의 오리에 이어 충남 부여에서 처음으로 닭이 고병원성에 감염되고, 충남 금강하구·삼포호와 경기 시화호의 철새 등이 고병원성에 폐사돼 그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또한, 해남 오리농장을 다녀간 축산

관계자가 무안, 구례, 곡성 등 15곳에서 오리사육을 하고 있는데다 해남 농장주가 직영하는 농장이 나주·영암 2곳 등 모두 17곳에 달해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다.

AI가 전북에서 저지선이 뚫려 전남·충남지역으로 퍼진 것은 당국의 대응체계가 그만큼 허술하다는 데 있다. 전국에 AI 경계령이 내려졌는데도 이동 제한조치를 하지 않고, 해남 농장의 경우 AI 의심 신고조차 뒤늦게 했더니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정부, 지자체는 3년 전 예방과 방역에 실기(失機)하면서 전남을 비롯한 전국에 막대한 피해를 안겼던 우를 더 이상 범해서는 안 된다. 특히 설 연휴 인구 대이동 전에 AI가 진정될 수 있도록 선제적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AI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9일 광주·전남·북에 내렸던 ‘일시 이동 중지 명령’(Standstill)을 다시금 발동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기업’ 삼성도 영호남 차별이라니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 삼성이 올부터 도입한 신입사원 대학총장 추천권 배정이 형평성을 크게 잃었다는 지적이다. 영남과 수도권에 편중된 데다, 이공계열에 치우쳐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선, 영남권과 호남권의 두드러진 불균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삼성의 지역적 기반이라 할 수 있는 경북대는 명문 사립대인 연세대·고려대와 똑같은 100명씩 추천권을 받았다. 부산대(90명), 영남대(45명)도 호남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였다.

반면, 경북대·부산대와 같이 거점대학의 위상을 지니고 있는 전남대는 40명, 전북대는 30명에 불과했다. 부산에 있는 부경대(45명), 동아대(25명)에 비해 호남대(10명)와 목포대(10명)도 훨씬 적은 인원이 배정됐다. 기업 내부의 원칙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는 없었지만 심각한 편향성은 그 위신을 깎는 일이다.

이에 대해 삼성은 “휴대전화·반도체

등 삼성이 필요로 하는 이공계 인력 풀업자 수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강변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학문 영역간 소통을 증시하는 융·복합이 큰 흐름이다. 삼성 스스로 인간 위주의 ‘휴먼 테크’를 강조하면서 이를 거스르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또 총장의 추천을 받았다고 해서 최종면접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일단 선정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삼성 인·적성 검사’(SSAT)를 치러 선발할 것으로 보여 또 다른 폐단이 예상된다. 대학은 모의 SSAT를 통해 추천인원을 뽑을 수밖에 없어 학내 경쟁과 이에 필요한 경비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삼성이 이번 조치는 대단히 실망스럽다. 지역적 배분 및 공정한 평가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부작용만 키울 뿐이다. 총장 추천 선발이 국민적인 호응을 얻기 위해선 그에 걸맞게 개선해야 한다. 삼성은 글로벌 기업의 격(格)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서양에서는 여왕의 남편을 부군이라고 부르며, 이들에게는 보통 ‘대공’과 ‘공작’이란 작위가 주어진다.

마리아 테레지아의 남편 프란츠 슈테판과 엘리자베스 2세의 남편 필립공은 왕족의 신분을 버리고 사랑을 선택한 것으로 유명하다.

프란츠 슈테판은 로렌공국의 왕위계승권자였지만 합스부르크의 유일한 상속자인 마리아 테레지아와 결혼하면서 6세기동안 지배해온 로렌공국을 기꺼이 포기했다. 프란츠 슈테판은 테레지아의 왕위 계승권을 인정받기 위해 자신의 로렌공국을 폴란드 국왕에게 넘길 정도로 사랑에 헌신적이었다.

필립공은 어머니가 영국 빅토리아 여왕의 증손이기도 하지만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해군에 복무하는 등 영국에서 청년시절을 보내다 엘리자베스 2세와 결혼했다. 그리스 왕실 출신인 필립공은 왕위 계승권을 포기하고, 사랑을 선택함으로써 ‘세기의 로맨스’라는 전형을 열었다. 여왕의 그림자로 살았던 이들과 달리 빅토리아 여왕의 남편 알버트공은 여왕과 동등한 관계를 유지했다. 게르만 왕

자 출신인 알버트는 뛰어난 학식과 노련한 정치술로 여왕의 막후에서 실력을 행사했다.

다음의 일화는 그의 위상을 말해준다. 어느날 여왕과의 의견 충돌로 화가 난 알버트가 문을 잠근채 아무도 방안으로 들이지 않았다. 얼마 후 여왕이 문을 두드리자 일무러 “누구세요?”라고 물었다. 저쪽에서 “영국 여왕입니다”라는 대답이 왔지만 열어주지 않았다. 이어진 노크에 “누구세요?”라고 물었고 여왕이 “빅토리아입니다”라고 답하자 미동도 하지 않았다. 여왕은 또다시 문을 두드렸고, “당신 부인입니다!”라는 답을 하고서야 들어갈 수 있었다.

차기 유력 대선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이 당선이 될 경우 남편의 호칭을 ‘퍼스트 메이트’가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퍼스트 레이디’에서 따온 것으로, 미국 역사상 여성 대통령이 탄생하지 않아 이런 호칭이 나온 것이다. 만약 힐러리가 대통령이 된다면 두번의 대통령을 지낸 클린턴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어떻게 호칭이 결정될지 벌써부터 궁금해진다. /장필수 사회팀장 bungy@kwangju.co.kr

법조칼럼

공과 사의 구별



김정희
변호사

공과 사를 구분하는 일은 상식의 범주에 있지만, 우리 사회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식에 미치지 못하는 모양이다.

한 검사가 자신이 수사했던 한 여자 연예인을 돕기 위해 병원의사를 공갈해 돈을 받아주고, 그 검사는 그 사실을 안 그 병원 간호사에게 협박을 당해 돈을 건네주었다는 소위 ‘해결사 검사’ 기사를 보고 필자는 분노보다는 차라리 허탈함과 쓸쓸함이 앞섰다.

사건을 다룬 기사들의 행간은 한 여성을 구속한 검사의 인간적인 연민은 들어 있을지 모르지만, 검사라는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것에 대한 급기

와 경계심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모습이 한 공직자의 일탈이라고 치부하고 싶지만, 공직 곳곳에서 직권남용, 원전납품비리, 인사청탁, 입찰비리 등 여러 가지로 모습을 바꾸며 심심치 않게 되풀이되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공과 사의 구별은 공무원의 영역에 그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를 흔들고 있는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도 본질적으로 이와 다르지 않다고 본다. 정보화시대에 개인정보는 개인과 공동체의 인격과 재산에 그 자체라고 볼 수 있기에 개인정보보호법은 그 관리에 관하여 공공기관은 물론 사기업에도 엄격한 관리책임을 부여하면서 그 관리업무가 공적영역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카드회사는 고객정보를 매출을 올리기 위한 영업자산(데이터) 이상으로 보지 않았고, 유출자 역시 그 인식은 다르지 않았기에 그 정보를 아무렇게도 공개 제3자에게 팔아버린 것이다.

결국 공적인 기능을 사사로이 이용한 대가는 개인은 물론 온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으며, 앞으로 그 피해가 어느 정도일지

도 모르는 상황이 돼 버렸다.

공과 사를 구별하여 실천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는 않다.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의 경계선을 어디에 긋는가 하는 문제는 자신의 역사적 문화적 정치적 경험들과 과정에 의해 형성된다. 그러나 경계선을 어디에 다 긋느냐와 관계없이 남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 다수인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공적인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공적인 영역에 속한다고 한다면 우선, 엄격한 기준과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할 것이다.

공사의 구별의 문제를 개인의 도덕적인 해결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은 일이 계속되는 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책임도 한 몫 한다. 공적기능에 손쉽게 접근하고 싶은 우리 사회의 욕망과 공적기능을 살 수 있다는 배급주의가 그 구별을 어렵게 하는 압력 요인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첫째, ‘편의를 봐주라’든가, ‘특별한 대우를 해달라’든가 그도 아니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우리 사회에서는 지인을 통해 부탁이나 청탁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 부탁할 수 있는 인맥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동창

회, 향우회 등 수많은 모임을 한다. 학연, 지연, 혈연이라는 것이 단순히 나와 관계있는 사람들과 편하게 만나자고 하는 순수함도 있었지만, 이런 공적기능에 쉽게 접근해 이를 이용하여 싶은 욕망의 반영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런 무수한 많은 모임을 위해, 퇴근 시간 이후 다시 우리는 정신노동을 해야 하는 것이다. 논리비약일 줄 모르지만 그 모임을 때문에 우리의 ‘저녁이 있는 삶’이 희석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둘째는 돈이면 모든 것을 사고 팔 수 있다는 물질주의도 한 몫 하겠다. 개인정보를 사는 자들은 자신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으니 무엇이 문제냐고 항변할지도 모르는 것이다.

“정치권이 모범을 보이고, 법집행을 엄정히 하며, 도덕적 기준을 높이자”는 원론적 이야기 외에 필자가 공과 사의 구별이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해법도 갖고 있지 않다. 다만 미국의 토머스 제퍼슨의 “공공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자신을 공공의 재산으로 여겨야 한다”는 문장으로 글을 끝맺고자 한다.

여수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개소 의미



양한나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장

여수산업단지에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가 28일 개소한다. 정식명칭은 ‘여수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다. 명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기관이 어떤 곳인지, 어떤 성격을 띠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다.

먼저, ‘여수’는 센터의 소재지와 관할구역을 동시에 나타낸다. 여수지역은 국내 최대 화학산단이 위치하여 자칫 소홀할 경우 대형사고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곳이다. ‘화학재난’은 화학물질로 인한 재난, 바뀌 표현하자면 화학물질 사고 및 피해를 말한

다. ‘합동(合同)’은 사전적 의미로 여럿이 모여 하나를 이룬다는 뜻으로, 재난을 막는다는 의미인 ‘방재(防災)’와 결합하면 여럿이서 함께 재난을 막는다는 뜻이 된다. 즉 ‘여수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는 대규모 산업단지가 위치한 여수지역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 사고와 피해를 여러 기관이 함께 막는 기능을 한다.

마지막의 ‘센터’(Center, Centre)는 ‘중심’, 즉 ‘한가운데’를 의미하며, 동사로는 ‘중심에 두다’, ‘집중시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를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 적용해보면, 화학사고의 예방, 대응과 관련하여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기능들을 한데 집중시켜 방재역량을 한층 더 강화한 특별기관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합동방재센터는 협업행정의 산물이다. 그동안 위생성이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는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방재청 등 유관 부처가 각각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산

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개별법령을 통해 분산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체계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 관리가 가능하지만,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약점이 있다. 특히, 화학사고 발생 시에는 기관간의 협력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응에 허점을 보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작년엔 미국 텍사스의 한 비료 공장에서 발생한 무수암모니아 폭발사고다. 15명이 사망하고 200여 명이 부상당한 이 사고에서는 정확한 물질정보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압 기관의 개별적인 대응이 큰 화를 불렀다.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는 이러한 분산관리 체계의 약점을 보완하여, 유관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화학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구조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특히, 전국의 6개 주요 산업단지에 위치하여 9개의 유관기관 소속인력 37명

(1개 센터)이 함께 근무하면서 공동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은 협업을 넘어 융합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시험대라고 할 수 있다. 사고 접수·출동·구조 기관의 소방방재청, 유해화학물질의 특성과 측정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환경부, 업종별 산업공정 안전체계를 구축한 고용노동부,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에 대한 상세정보를 보유한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지역민의 재난대피 시스템을 구축한 지자체 등의 각 기관의 강점들을 하나로 융합할 경우 그 시너지 효과는 극대화될 것이다.

합동방재센터의 성공의 열쇠는 유관부처가 물리적 칸막이 제거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고의 방재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의지를 결집하여 실질적 융합을 이뤄내는 것에 있다. 이는 협업과 소통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정부3.0의 가치와도 일맥상통한다. 정부3.0의 성공을 합동방재센터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야 할 것이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합의에 따라 고시원 같은 곳에도 전월세권을 설정할 수 있는 법률적 보호도 필요하다.

아울러 초소형 임대주택을 크게 늘리고, 1~2인 가구의 연령과 소득, 주거선호에 맞는 다양한 주거유형을 개발해야 한다. 고령자 전용 미니 주택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이런 곳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급한 일이 벌여졌을 때 간조사 등과 쉽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으면 좋겠다.

▶임윤빈·광주시 광산구 진곡동

늘어나는 고시원 편의·소방시설 제대로 갖춰야

시내에 고시원이 참 많다. 고시원은 원래 고시공부 하거나 다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공부방이었다. 그러나 요즘에는 전·월세 주택을 구하기 어려운 빈곤한 서민들의 거처로 성격이 바뀌었다.

거기다가 1~2인 형태의 소형 가구와 고령의 나 홀로 가구가 급증하다 보니 고시원이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추세다. 가족 없이

혼자 살거나 가족과 떨어져 단독 세대를 구성해 따로 사는 젊은 남녀들이 늘어나는 반면에 아파트 같은 건 34평 위주로 큰 것만 지어다니 고시원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즉 이 부족분을 주거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지만 비교적 값싼에 잠자리를 해결할 수 있는 고시원이 메워주고 있는 것이다. 거기다가 고시원 요금조차 내기 어려운 극

빈층은 쪽방이나 비닐하우스 같은 더 열악한 시설로 내몰리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와 소득 양극화 추세로 인해 저소득 1~2인 가구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고시원 같은 준주택을 더 양성화하고 화재 예방은 물론 기타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도록 관리 감독해 주기 바란다. 즉 고시원을 허가할 때도 요리, 휴식, 세탁 등을 위해 공동으로 사용할 필수 공간을 두도록 하고,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한 최소한의 규제도 있어